

“종교인 과세에 대한 기독교계의 입장” 선언

종교의 자유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불변의 가치이며 어떤 경우에도 침해될 수 없는 천부적 가치입니다. 종교의 특성과 목회자 사역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은 종교정책은 갈등과 혼란을 야기할 뿐입니다. 때문에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종교인과세를 일방적으로 추진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우리 대다수 종교인들의 기본 입장입니다.

우리는 2018년 1월 시행을 앞둔 종교인과세가 종교의 특성을 도외시킨 가운데 일반적인 사회의 기준과 잣대로 시행되는 정책이라는 데 깊은 우려를 표하면서, 정부당국에 시행시기의 유예를 포함한 세부과세기준 수립 및 다양한 소득원천과 지급방법 등 중립고려사항에 대한 정책 수정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종교간, 종단 및 종파간의 상이한 특성을 정책에 반영하지 않은 종교인과세를 무리하게 강행할 경우, 국가와 사회공동체의 갈등과 분열, 조세 저항 및 종교의 정치참여 가속화 유발이라는 혼란을 초래할 뿐입니다.

종교인과세 시행의 중요한 본질은 정부당국과 교계와의 충분한 합의와 공감대가 조성되어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나아가 각 교단의 헌법과 각 교회의 운영정관과 재무회계시행세칙 등 교회자치법규가 존중되는 가운데 과세의 명확한 기준과 범위가 한정된 연후에 추진되어야 합니다.

우리 종교인들은 회계나 세무관련 지식과 경험이 극히 부족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내부적으로는 각종 회계처리시스템이나 세무교육체계 등 관련 인프라가 거의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종교인과세 정책은 일정한 시간이 걸리더라도 당사자를 설득하고 상호 협의를 통한 이해와 협조를 통해 시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행에 앞서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하고 계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분당중앙교회와 국민일보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이 주관하는 ‘종교인과세 대책을 위한 컨퍼런스’에 참가하여 한국기독교사회의 여론을 반영하고 교파를 초월한 목회자들과 교회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교인과세에 대한 기독교계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대내외에 천명하는 바입니다.

첫째, 우리는 종교인과세 시행의 주체인 정부당국과 남세 당사자인 종교인, 양자 간에 전체적으로 과세 시행에 필요한 준비가 여전히 부족하고 관련 기준이 전혀 마련되지 않은 상황임을 감안하여, 2018년 1월에 예정되어 있는 종교인과세 시행시기를 유예해줄 것을 정부당국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둘째,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종교인과세를 받기로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대한 세부조사나 세무사찰을 단호히 배격하며, 사회적으로 발달되지 않은 영적

구도단체인 교회가 과세시행의 연착륙을 할 수 있도록 정부당국이 교계 대표들과 대화와 소통의 협의 장구를 개설할 것을 촉구합니다.

셋째, 우리는 이제라도 종교인과세의 불합리한 부분과 미비점을 보완하여 세금납부 대신 가난하고 고통 받는 사람들을 돕는 대체방법 등도 포함하여 검토·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역설하면서, 정부당국은 각 교단의 헌법과 교회자치법규를 존중하는 가운데 누구나 공감하고 지지하는 과세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넷째, 우리는 종교간, 종단 및 종파간 상이한 예산 수입 및 지출항목 등의 처리방법이 미비하고, 교회의 각종 기준이 마련되지 못한 현실을 반영하여 교회의 예산결산항목 중 사비비 항목에 한정하여 과세를 시행하는 “종교인 과세 범위로 한정하여 과세할 것”을 정부당국에 건의합니다.

다섯째, 우리는 사회적 공공성과 공공회성 강화를 통해 각 교회가 내부적으로 철저한 재정운영의 투명성 확립과 회계구조시스템, 세무인프라를 구축하고 교회재정 운영이 적법성, 정당한 절차, 공직성을 견지하는 가운데 예산의 확보와 집행과 결산 등 투명한 재정 행위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2017년 6월 19일

인사를 망치면, 만사를 망치는 것이 아닌가?

문재인 정부의 장관 후보자 합당인가?

다수자의 인권은 중요하지 않고, 소수자의 인권을 중시하는 것이 인권의 본질로 본다면, ‘인권’이란 지속적으로 편향된 것이라 생각된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가진 인사가 문재인 정부가 법무부장관으로 지명한 안경환 전 국가인권위원장의 생각이다.

안경환 후보자가 국가인권위원장으로 있던 곳에서는 정부에 대하여 ‘차별금지법’을 만들라고 권고했었다. 당시에 국민들은 결사적으로 이를 반대하였다.

그런데 국가인권위원장 출신이 법무부장관이 되면, ‘차별금지법’은 어떻게 되겠는가?

소위 ‘차별금지법’은 소수자를 차별하지 말라고 하면서, 결국은 절대 다수를 ‘역차별’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이것이 법의 본질인지 묻고 싶다.

안 후보자는 특정 색채를 띤 시민단체에서도 활동했고, 소수자의 인권을 대변하는 기관에서 일한 경험으로, 대다수 국민들을 강자의 관점으로 본다면, 국민들의 권익은 누가 지키는가?

또 한 사람, 우리나라에서 ‘학생인권조례’를 2010년에 처음 만든 사람이 있다. 경기도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최초로 만들어지므로, 결국은 학생들이 교사에게 대들 권리, 공부 덜 하고 놀 권리, 정치적

표현의 권리를 주었던 것이다.

또 동성애 확산과 음란으로 학생들 사이의 도덕과 윤리가 무너졌다. 오죽하면 인격형성과 공부에 몰두해야 할 학생들이 ‘섹스할 권리’까지 들고 나왔겠는가?

그는 또 교육예산을 학생들의 급식비로 돌려서, ‘무상’ ‘공짜’를 유행시켰다. 그런가 하면, ‘혁신학교’를 만들어 우대하는 정책을 펴고, 자사고(특목고)는 폐지한다고 한다. 그로 인하여 교육현장은 ‘편 가르기’로 소란하다.

또 교육의 질은 떨어지고, 학생들의 학습능력도 떨어졌다. 공교육이 부실하면, 사교육비만 더 늘어간다. 피해는 누가 보는가? 학생과 학부모이다. 더 나아가 국가와 국민들이다.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진 일부 교육청 지역에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 학생들의 ‘기초학력미달’ 비율이 더 높다는 분석도 있다.

그게 누군가? 문재인 정부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로 세운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이자,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선거대책본부장과 교육공약 설계를 총괄했던 사람이다. 코드를 맞추기 위한 것인가? 보은(報恩) 인사인가? ‘탕평책’과는 한

참 거리가 먼 인선이다.

더군다나 김상곤 후보자는 석/박사 학위 논문에서 200군데 이상에서 표절의 의혹이 있다는 언론보도도 있다. 어찌 교육수장이 정직하지 못하면서, 대한민국의 교육을 책임질 수 있겠는가?

미국에서도 학생들에게 한동안 ‘표현의 자유’를 만격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문제점은 끊이지 않았고, 급기야 미국 연방대법원은 ‘학생들이’ 다른 환경에 있는 어른들의 권리와 동일한 범위로 향유될 수 없고, 학교 환경의 특수성의 견지에서 적용되어야 한다’는 판결을 내놓기까지 하였다.

지금 문 대통령이 내세운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우리 사회를 급진적인 진보로 몰고 갈 가능성이 커, 우리 사회를 혼란에 빠뜨릴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후보자 철회를 해야 마땅하며, 만약 대통령이 이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치권에서 나서서 우리 사회의 미래와 교육의 미래를 위하여 철저히 장관 후보자를 검증하고, 국정의 일선에 나서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여야 한다.

- 한국교회언론회 -

사설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6.25 남침전쟁 67주년을 맞아 북한과 미사일 위기가 최 고조된 가운데 한미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견고하게 더욱 다진되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김정은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 정책에서 미국과 유엔의 대북 제재 공조 노선에서 벗어난 언동을 내놓고 있어 이에 우리 국민들은 우려와 불안 속에 날들을 보내고 있는 실정이다.

67년 전 북괴의 기습남침으로 6.25전쟁이 발발하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유엔은 미국, 영국, 캐나다, 터키 저 멀리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 등 21개국, 194만 1천여 명의 용사들을 참전케 하여 공산화 망국 위기에 처한 우리를 지켜주었다.

이 전쟁에서 특히 미국은 모두 180만 명의 젊은이들을 파병하였고 그중 5만 4천여 명이 알지 못하는 우리 나라를 위해 피 흘리고 목숨을 바쳤다. 전사한 국군 장병은 13만 7천 889명이었다. 후일 박정희 대통령 시대 우리나라는 이에 보답하는 의미도 담아 연 30만 명의 국군을 월남에 파병하여 공산군 심벌에 동침하게 하였고 국군 장병 5천여 명이 전사하였다. 한미 동맹은 이처럼 피로 얽힌 역사 속에 다져져 왔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만큼 민주주의에 성공하고 경제적으로 세계 10위권을 누리게 된 것은 우리 국민들의 피와 땀이 주동력이었지만 한미 동맹의 철통같은 안보·외교적 안전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사실을 전 세계가 알고 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남왕국 유다는 북방의 앗수르와 바벨론이란 강력한 세력과, 국경을 인접한 강대국 애굽과의 틈바구니에 들어 있는 약소국으로서 참으로 지혜로운 안보 외교를 전개해야 할 처지였음을 볼 수 있다. 결국 강대국 관계 실패로 주전 586년 바벨론에게 완전 함락되어 방국의 비운을 당했다.

예언자 이사야(740-690BC), 예레미야(625-585BC), 에스겔(603-570BC) 등은 대대로 왕들을 거쳐 가면서 국경을 맞대고 있는 애굽을 결코 의지하지 말라고 경고하였다. 그 이유는 애굽은 강대국이긴 하나 우상과 잠신을 섬기는 나라이고, 대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고통시켜 왔다는 점, 그리고 국가 안보는 “병자와 마병의 강함”을 의지함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

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먼저 비로써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러나 유다 왕국의 국운이 기울어 가던 말기 왕들인 여호아하스, 여호아김, 여호아진, 시드기야 왕 등이 선지자의 충언을 외면하고 군사력이 강력한 애굽에 더 의지하고 북방 강대국과 적대적 자세를 취하다 미움을 받아 결국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이르러 민족의 포로와 국가의 멸망을 당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주변 강대국을 상대로 한 외교안보 질서와 관련하여 교훈을 삼을 만한 말씀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신앙신과 애국심, 애국심과 신앙심은 동심원(同心圓)과 같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나라와 하늘 나라에 동시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세상 나라가 어지러우면 하늘나라의 신앙도 지키기 어려운 위기에 처한다.

과거 바벨론 포로로 나라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의 자유를 여주없이 박탈당했다. 오늘날 저 폭악자 김정은 처하의 북한 땅은 말할 것도 없고 이슬람 국가에서는 기독교 신앙은 물론 전교를 하려면 목숨을 걸어야 한다.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 민주국가라 신앙의 자유권지이다. 나라를 잃으면 신앙의 자유도 민족의 생존도 찬란한 문화의 지평도 다 사라진다. 체력 잃은 국민은 온 세상이 외면하는 유령민 신세가 된다. 오늘도 저 지중해를 건너 탈출 난민의 길을 가다 지중해 바다에 빠져죽어 가는 시리아, 리비아 등 중동 난민들의 모습을 보라. 내 조국이 혼란하고 위태롭게 되면 이 지구상 어디에서도 우리를 환영할 곳은 없다는 이 냉엄한 지구촌의 현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대한국민들이여, 그리스도인들이여, 나라를 지키자, 신앙을 지키자. 그러기 위해서는 조그만 행동이라도 애국심을 실천하자. 그리하여 그릇된 정신과 이념에 날뛰는 무리들을 척결하고 이 나라를 정의와 자유와 신앙의 터전으로 지키는 데 앞장서자.

주님은 말씀하신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예 3:15,16)

모형기대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1 / 재등록 서울 다-07857 주간

- 편집고문 : 정채위원장 조용목 목사
- 발행인 · 편집국장 박한근 목사

● 연락처 : 편집국 ▶ (02)2677-9935~6, 구독문의 ▶ (02)2677-9937
광고국 ▶ (02)2675-5183 FAX ▶ (02)2677-4609
웹하드 : ID-mok677 / PW-5277, e-mail mok2677@naver.com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 다길 5

● 본보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온라인게좌 : 국민은행 061701-04-128988 박한근

홈페이지: www.ucts.org

2017학년도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신·편입생 모집

● 설립취지

본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은 사명은 있으나 지역적, 시간적 여건 등으로 출석 수업을 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한 신학과정입니다. 소명의식을 가진 분이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입학할 수 있으며 본인 스스로 온라인인터넛으로 교과목을 수강하여 이수학점을 취득함으로써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1. 지원자격

학과	수업연한	지원자격
신학과 (신입생)	3년 6학기 (140학점)	1. 만18세 이상인 성인 남녀 2. 소명의식이 있는 자 3. 신앙경력 5년 이상인 자
신학과 (편입생)	2년 4학기	1.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2. 본 교단이 인정하는 타 신학교에서 편입하는 자는 이수한 학점에 따라 학년 결정

2. 제출서류(각 1통)

- ① 입학원서(소정양식)
*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또는 전화 요청시 우편발송
- ② 최종학교 졸업 및 졸업 예정 증명서
- ③ 타 신학교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편입생
- ④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 ⑤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 ⑥ 반명함판 사진 2매(3개월 이내 촬영)

3. 전형안내

- ①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② 서류심사 및 면접 : 수시
- ③ 전형료 : 20,000 원
계좌번호 : 국민은행 061737-04-005354(예금주 사이버신학연구원)

4. 접수방법

- ① 우편 또는 방문 접수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

5. 특전 및 기타사항

- ① 졸업 후 전도사 임명자격 부여
- ② 총회목회대학원 입학자격 부여
- ③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교무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교무처 : 02)2678-5181
e-mail : ucts5181@naver.com

ASSEMBLIES OF GOD

-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무처 02)2678-5181